



## 고등교육 정책/소식

### 수시 1학기 모집요강 발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이하 대교협)는 전국 81개 4년제 대학교의 2009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요강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2009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요강」 주요사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원서접수기간은 2008년 7월 14일(월)부터 7월 23일(수)까지 (10일간)의 기간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전형 및 합격자 발표는 7월 24일(목)부터 8월 31일(월)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합격자 등록기간은 9월 1일(월)~2일(화)까지 2일간이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이나 대학창구 등을 통해서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 일정과 방법으로 실시된다.

인터넷 접수와 창구 접수를 병행하는 대학이 58개교, 인터넷으로만 접수는 대학이 20개교이며, 창구 접수만 실시하는 대학은 3개교이다.

이울러, 인터넷 원서접수의 경우 전자접수의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수시 1학기〉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과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81개 대학에서 11,740명 (총 모집인원 378,625명의 3.10%)을 모집한다.

대학 설립별 모집인원은 국·공립대학이 7개 대학 966명(8.2%)이며, 사립대학이 74개 대학 10,774명(91.8%)이다.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이 52개 대학 5,064명(43.1%), 특별전형이 70개 대학 6,676명(56.9%)이다.

특별전형을 세분하면 특기자전형이 7개 대학에서 86명, 대학 독자적기준전형이 40개 대학에서 2,957명, 취업자전형이 1

개 대학에서 13명을 선발하며, 정원의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전형이 33개 대학에서 1,192명, 전문계고교출신자전형이 40개 대학에서 1,741명,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이 2개 대학에서 26명,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이 7개 대학에서 154명을 모집하고, 처음으로 적용되는 기회균형선발 전형은 2개 대학에서 5명을 선발한다.

수시 1학기의 모집인원은 대학별 정원조정 또는 2008학년도 미충원인원의 이월 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수시 1학기〉모집의 주요 전형요소는 대학별, 모집단위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 면접·구술고사, 실기고사 등을 활용하며,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된다.

- 일반전형(53개 대학)의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만 100% 활용하는 대학은 31개교이며,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구술을 병행하는 대학이 21개교이고, 학생부와 면접 및 기타요소를 활용하는 대학이 1개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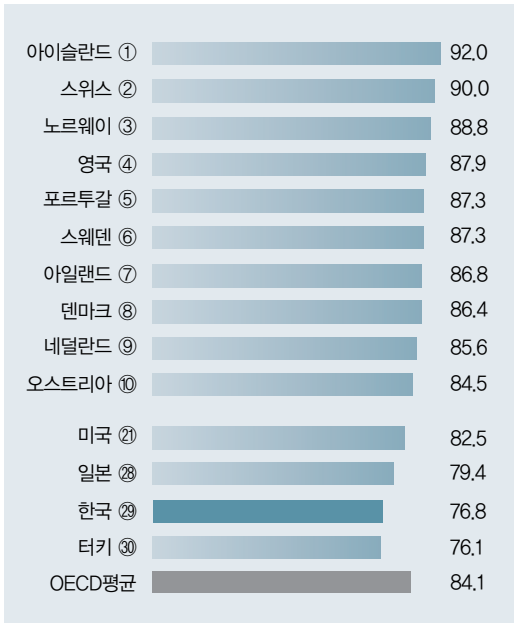
- 또한 수시모집의 특성상 일반전형보다는 특별전형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특별전형에서는 특기나 소질 등에 따른 실기고사와 입상실적, 자격, 추천서 등 별도의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보도자료는 대교협 홈페이지 [www.kcue.or.kr](http://www.kcu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OECD회원국 중 대졸 이상 고용률 최저

◎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자의 고용률 부문에서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졸 이상 여성 인구는 늘고 있지만 고용률은 별로 개



OECD 회원국 대졸 이상 고용률

\* 2005년 현재, OECD 30개 회원국 기준(단위: %)

\* 자료: OECD, 통계청

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대기업 등 관참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사실상 실업 상태를 선택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6월 19일 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 고용률은 76.8%로 OECD 30개 회원국 중 터키(76.1%) 다음으로 낮았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대졸 이상 고용률이 76.8%라는 것은 대졸자 100명 중 77명 정도만 일자리를 갖고 있고, 나머지 23명은 실직 또는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고용률은 OECD 평균(84.1%)에 비해 7.3% 포인트나 낮다.

OECD 회원국 중 대졸 이상 고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무려 92%다. 이어 스위스(90.0%), 노르웨이(88.8%), 영국(87.9%)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미국(82.5%), 프랑스(81.6%), 일본(79.4%) 등은 터키, 우리나라 등과 함께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 교과부, 해외교수 임용 인건비 전액·연구비 등 지원

○ 정부가 국내 대학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간 8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사업계획을 확정, 공고했다고 6월 19일에 밝혔다. WCU 사업은 '두뇌한국(BK)21'과 함께 교과부의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난달 초 시안이 공개된 바 있다. 교과부는 시안 발표 후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확정안을 공고했으며, 9월 20일까지 희망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 WCU 사업은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의 저명학자를 국내 대학에 임용할 때 드는 인건비 전액,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초빙 대상은 해외 대학·연구소·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외국인과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해외 소재 한국 국적의 학자 등이 포함된다. 교과부는 해외 학자들을 전일제 교수로 채용해 새 전공·학부를 개설하는 경우(지원유형 1), 기존 학과 또는 연구소에 해외학자 1~2명을 전일제(全日制) 교수로 채용하는 경우(지원유형 2),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을 비전일제 교수로 초빙하는 경우(지원유형 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 대학·연구소 기술사업화에 778억 투입

○ 대학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켜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기술사업화에 올해 778억 원의 정부지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08년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기술사업화 촉진예산은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484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과학기술부 40억 원, 환경부 55억 원, 특허청 107억 원, 중소기업청 75억 원 등에 배정됐다. 이 외에도 올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켜갈 방침이다.

###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 심사기준

○ 향후 5년간 총 8250억 원을 투입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사업 선정에서 해외 석학 유치 및 활용계획서를 50%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월 7일(수) 대전 KAIST에서 중남부권 지

방 대학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세부 평가지표를 밝혔다. 새로운 전공(학과) 개설을 지원하는 제1유형은 △해외 석학 유치·활용 계획서 평가 50% △연구팀 1인당 연구실적 평가 40% △학교의 여건 및 추진의지 평가 10%를 반영하며 해외 석학이 반드시 50% 이상 포함되고 3년 이상 전일제(Full-Time) 전임교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해외 석학 5인 기준으로 40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

제2유형은 1인당 5억~8억 원이 지원되는 해외 석학 개별 초빙은 제1유형과 평가 항목은 동일하지만 계획서 평가 40%, 연구실적 평가 50%로 배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3유형은 비전임 교원에 대한 지원으로 유치·활용 계획서 평가 90%와 학교 여건 및 추진의지 평가 10%로 선정한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서효진 부경대 교수는 “어느 해외 석학이 서울도 아닌 지방에서 3년간 전임으로 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영무 KAIST 교수는 “제3유형은 해외 석학이 국내에 단 2주를 머물러도 3억~5억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 최소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찬반 토론 없이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대학 관계자와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부실 공청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5년 내 3회로

○ 오는 2009년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졸업 후 5년 이내에 변호사 선발(자격) 시험을 3번까지만 볼 수 있게 됐다.

또 시험 과목은 헌법, 민법 등 법학 기본 과목 위주로 편성되며, 별도의 예비시험이나 면접시험은 치르지 않는다.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화숙 연세대 법대 교수)’는 5월 8일(목) 이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쯤 학계와 법조계,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 교원 평가제법 결국 자동 폐기

○ 정부가 교사들의 자질 향상과 경쟁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끝내 17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시행할 방침을 세웠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월 13일(화)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현재 계류 중인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술한 논란을 낳으며 1년 6개월가량 국회에 계류돼 있던 교원평가제법은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이달 31일(토)자로 자동 폐기된다.

### 교육과학기술부, 비전 및 MI 발표

○ (구)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하여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의 비전과 MI(Ministry Identity)가 확정됐다.

교과부는 5월 15일(목) 통합부처를 상징하는 비전으로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을 발표하였다. 이 비전은 미래인재대국, 과학기술강국 실현을 통한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고, 교육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미션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부처의 역할과 가치를 공유하고 조직원의 융합과 일체감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전 공모를 실시하였다. 총 40여 건이 응모되었으며 후보작 5건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여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을 비전으로 선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교과부는 부처의 역할과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MI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MI는 가장 교육적이고 과학적이라 평가받는 한글을 모티브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공통 자음인 ‘기’를 시각화하였다. 또한 ‘기’가 점층적으로 상승하는 이미지를 통해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을 나타내며 국가성장과 비상의 의지를 부각시켰다.

또한 3색(빨강-열정, 파랑-전문성, 노랑-창의성)의 컬러 퍼즐조형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미래 지향적인 과학기술정책을 표현하고 있다.

### 한-스위스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 대한민국 정부(교육과학기술부, 박종구 차관)와 스위스 연방정부(교육연구청, 마우로 델암브로조 청장)는 5월 6일



(화) 스위스 취리히공대에서 한·스위스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정 서명식에는 스위스 연방교육연구청장을 비롯해 외 교부 국장, 취리히공대 총장 및 부총장, 로잔공대 전 총장 등 이 참석하여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협정은 실용협력 체제 구축에 필요한 협력의 목적 및 활동의 형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설치 및 역할, 협력성과의 이용 조건, 분쟁발생시 해결 방안, 협정의 효력 등 중요사항 을 정하고 있으며, 상호 호혜의 원칙하에 전문가 및 과학기술 정보 교류, 공동연구, 공동연구소 설치·지원 등을 협력하며, 이를 통해 양국 과학기술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증진을 기 대한다.

특히 기존의 민간차원의 라운드 테이블을 정부주도의 공동위 원회로 격상, 분쟁발생시의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신 리와 실효성을 담보하는 실용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 한국 교육분야 전체 경쟁력 순위 작년보다 6단계 나 떨어져

○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교육의 질적 수준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 학경쟁력은 5위를 기록해 세계 정상권에 올랐다.

5월 15일(목) 교육과학기술부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의 '2008년도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 르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대 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에서 우리나라는 55개 대상 국 중 53위를 차지했다. 반면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은 55 개 대상국 중 4위로 최상위 수준이었다.

이는 '대학 졸업장'을 중시하는 국내 풍토 탓에 대학 졸업자 는 많지만 대학 교육의 질은 사회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전체 경쟁력 순위도 지난해 29위에서 올해 35위로 6계단이나 떨어졌다.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 순위는 2004년 44위, 2005년 40위, 2006년 42위 등 40위권을 맴돌다 지난해 29위로 13계단 뛰어올랐으나 올해 다시 30위권으로 밀렸다.

반면 과학경쟁력은 55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5위(지난해 7 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술경쟁력은 14 위에 올라 지난해보다 8단계나 하락했고, 2005년 2위를 기 록한 이래 계속 하락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언어능력의 기업요구 부합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지난해보다 점수가 올랐으나 '기술관련 법

### 한국 교육·과학·국가 경쟁력 세계순위 추이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과학	19위	15위	12위	7위	5위
교육	44위	40위	42위	29위	35위
국가	31위	27위	32위	29위	31위

\* 자료 : 국제경영개발원(IMD), 교육과학기술부

령이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에서는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투자를 확대하고 기 업 수요에 맞는 대학 교육을 유도하는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D가 경제운영성과와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 프라구축 등 4대 분야별 세부지표를 활용해 평가한 국가경쟁 력 순위는 55개국 중 31위에 그쳐 지난해 29위에서 2계단 하락했다.

한국의 종합국가경쟁력 순위는 2003년 32위, 2004년 31위, 2005년 27위, 2006년 32위, 2007년 29위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해에 다시 31위로 떨어졌다. 올해 경쟁력 세계 1위는 작년에 이어 미국이 차지했고, 싱가포르와 홍콩, 스위 스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대만(13위), 중국 (17위), 말레이시아(19위), 일본(22위), 태국(27위), 인도(29위) 에 뒤진 것으로 평가됐다.

### 영 옥스퍼드대, 영국 대학평가에서 1위 탈환

○ 명문 옥스퍼드대가 영국 대학평가에서 라이벌 케임브 리지대를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4월 24일(목) 공개한 올해 '굿 유니버 시티 가이드'에서 5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가 지난해 케임 브리지대에 1위 자리를 내준 옥스퍼드대가 올해 영국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2위는 케임브리지대, 3위는 런던정경대 (LSE)와 임페리얼 칼리지가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학생만족도 ▲연구평가 ▲입학기준 ▲학위수 여 결과 ▲졸업률 ▲구직 전망 ▲교수 대 학생 비율 ▲교내 시설 투자 등 9개 부문을 종합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학생 만족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옥스퍼드가 1위를 차지하긴 했으나, 전공별 평가에서는 케임 브리지가 과학, 의학, 공학, 외국어, 역사, 경제, 법학 등 35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한 반면, 옥스퍼드는 지질학 중등·아프 리카학, 음악, 정치학 등 4개 전공에서만 1위를 차지했다. 케

임브리지는 학생 만족도, 연구 평가, 입학 기준에서 1위를, 옥스퍼드는 학위수여 결과와 졸업률에서 우위를 나타냈다. 올해 조사에서는 상위 20위 가운데 11개 대학이 이른바 '러셀 그룹'의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셀그룹'이란 연구활동이 활발하고 산학관계가 좋은 상위권 대학들로 구성된 일종의 연합체이다.

### 노동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 내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2만 명의 대학생·청년들이 인턴과 취업연수 형식으로 세계를 누비게 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 취업 연수자 5만 명, 외국 인턴 3만 명, 외국 봉사자 2만 명 등 모두 10만 명의 글로벌 청년 리더를 양성하는 내용의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계획을 4월 29일(화)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연간 2500명 수준인 외국 취업 연수 인원을 연간 5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건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전문 건설인력 700명을 파견해 연수를 받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 구인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청년들이 해외 일지에서 필요한 언어를 익히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증 받은 대학이나 민간기관 연수 프로그램에 직접 응모하면 된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내용

구분	사업	지원 대상·기간
해외 취업	해외 취업연수	미취업 청년 3~12개월 연수
	해외 건설인력 양성	미취업 청년 2~6개월 교육
해외 인턴	전문대학생 해외인턴	전문대학생 16주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4년제 대학생 16주
	국제무역 전문인력 양성	대학생 2~6개월
	재외공관 인턴	대학(원)생 6개월
	국제 전문여성인턴	여성 대학원(1년) 산림분야 인턴 산림전공(2년)
해외 자원 봉사	해외봉사단 파견	대학 졸업생 2년
	대학생 국내외 봉사활동	대학생 단기(1월), 중기(6월)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대학생 1~3개월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단	이공계 대학생 1년

\* 자료 : 노동부

### 교과부, 감사청구제 도입

○ 학부모나 대학생이 초·중·고교나 시·도 교육청, 또는 대학을 감사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제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5월 19일(월)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정부패 및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한 '클린 365'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들은 일선 초·중·고교와 시·도 교육청에, 그리고 대학생들은 자신이 소속된 대학에 대해 각각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가 감사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 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제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월가 "사우디 대학 잡아라"

○ 미국 월가의 유명 투자회사들이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학의 기부금 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월 19일(월)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를 표방한 킹압둘라 과학기술대(KAUST)는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캠퍼스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등록한 학생은 아직 한 명도 없다. 그런데 벌써부터 미국 월가의 유명 투자회사들로부터 "대학의 기부금 운용을 우리에게 맡겨 달라"는 요청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블랙록·베인캐피털 등과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블랙록은 2006년 메릴린치 자산운용과 합병하면서 급성장한 세계 1~2위권의 대형 자산운용사이고, 베인캐피털은 월가의 대표적인 사모펀드다. 월가가 이 대학의 기부금 운용권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압둘라(Abdullah)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작년 12월 "세계 초일류의 교수진과 학생을 유치하는 데 쓰라"며 대학 측에 100억 달러(약 10조 4300억 원)의 거금을 쾌척했기 때문. 이 금액은 미국 MIT가 지난 142년간 모금한 기부금의 총액(99억 8000만 달러)보다 많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가장 최근에 조성한 국부펀드(53억 달러)의 약 두 배에 달한다. 더욱이 KAUST의 기부금은 조만간 250억 달러(약 26조 700억 원)

로 늘어날 전망이다어서, 미 하버드 대학(350억 달러)에 이어 대학 기부금 규모로는 세계 2위가 된다고 FT는 전했다.

### 헬싱키 경제대학 제주분교 9월 개설

핀란드의 헬싱키 경제대학(HSE · Helsinki School of Economics) 제주캠퍼스가 예정대로 9월 서귀포에 개설된다. 제주도는 이 대학 제주분교 설립운영 파트너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최근 분교 설립 신청에 필요한 제주도지사의 추천서와 임시 캠퍼스로 활용할 서귀포시청 2청사 사용 허가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5월 21일(수) 밝혔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 이달 중 교육과학기술부에 분교 설립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곧바로 강의시설로 사용할 서귀포시청 2청사의 리모델링과 교육시설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9월부터 정원 100명의 경영관리자과정(EMBA, 국제경영 · 디자인경영 · 해외마케팅 · 바이오경영 전공)을 운영한다. 2월 헬싱키 경제대학과 분교 설치 협약을 체결한 제주도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및 교과부와 접촉을 갖고, 캠퍼스 개설 준비를 해 왔다. 헬싱키 경제대학은 교과부의 대학 설립 · 운영 규정상 최소 규모(정원 100명, 교사 1200㎡ 이상)로 제주분교를 운영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제주영어교육 도시에 캠퍼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1904년 설립된 핀란드 국립대인 이 대학은 국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해 전 세계 관리자교육대학 중 랭킹 27위로 발표한 바 있다. 헬싱키 경제대학 제주분교가 설립되면 3월부터 전남 광양에서 운영 중인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에 이어 국내 2번째 외국교육기관이 된다.

### 교과부, 연구윤리 확립 교육지원

정부가 논문 표절이나 이중 게재 등 연구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월 29일(목) "한국 학술진흥재단과 함께 국제 수준의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과 학술단체,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교육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연구 부정행위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리포트 작성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각 학문 분야에 걸쳐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 해당 분야의 연구 윤리를

자율적으로 확립해줄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

### 대기업 취업은 의학계열과 기계, 전자공학계열이 '최고'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의약계열이 가장 높고 자연계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부문 취업률에서는 공학계열이 상위 8개 과를 차지해 양적으로는 의약계열을 추월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5월 26일(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현황과 학과별 직업 진출 분야 등을 정리한 '대졸자 취업정보'를 제작,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의 취업률은 평균 77%였으며 의약계열이 87.6%로 가장 높았다. 예체능계열(82.5%)이 그 뒤를 이었고 자연계열(68.1%)이 가장 낮았다. 근로자 300명 이상인 대기업 취업률 역시 간호학과(66.9%)와 의학과(64.3%) 등 의약계열이 1·2위를 차지했고, 이어 기계공학(55.5%)과 전자공학(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항공학(9위 · 45.1%), 전기공학(10위 · 43.9%) 등 공학계열이 상위 10위권 중 8개 과를 차지했다. 공대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률은 평균 39.7%로 4년제 대학 전체 평균(27.5%)과 인문계열(21.1%), 사회계열(27.7%)의 취업률을 크게 웃돌았다. 예체능 계열은 취업률이 비교적 높지만 상용직이나 중일 근무하는 일반직장, 정규직 일반근로 등의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조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중국 고교 졸업장 국내서 인정

앞으로 중국 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오면 중국 고등학교 학력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월 27일(화) 중국 교육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 · 중 고등교육 학력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중국의 학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6-3-3제'(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 총 12년)이다. 그러나 일부 성(省)은 '6-3-2제'(11년)를 채택하고 있어 이들 지역 출신이 한국에 유학 오려면 중국에서 대학 1학년 과정을 한 해 더 이수해 12년을 채워야 대학 입학이 가능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11년제를 마친 중국 학생도 바로 한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양해각서는 또 중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학위를 취득한 자는 한국의 학사학위 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고, 중국에서 석·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한국의 석·박사 과정에 편입 또는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양국 대학생들이 서로 편입학하거나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개의 경우 개별 학교 간 협약을 통해 이뤄졌다.

### 대입 수시합격자 정시 지원 안 돼

◎ 교과부는 서울대가 대입 수시모집 합격자를 정시모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한데 대해 5월 28일(수) 불허 입장을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시모집은 대학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해당 대학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대학 서열화 구조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방안이 허용될 경우 수시 합격자들의 대규모 연쇄 이동으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ں 입장이다. 특히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군복무중 학자금 대출 연체 걱정 없어질 듯

◎ 대학(원)생들이 현역 군복무 중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이자 걱정 없이 군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역복무 중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라고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5년부터 국가 예산을 투입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로 학업을 이어가다가 현역 입대를 할 경우 군복무 중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이자를 계속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고충민원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되었다.

### 대입전형 계획, 대학이 자율 결정

◎ 교과부는 대입전형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하던 각종 기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하 대학협의회)에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위해 이미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을 대학 자율로 하고 수능등급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그 일환이다.

대입 자율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입전형 기본계획 대학 간 협의에 따라 자율 결정

이번 개정사항 중 가장 특기할 점은 기존에 교과부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2010학년도 전형부터 대학협의회가 회원대학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일정, 전형 유형 및 방법, 모집·지원 및 등록방법, 기타 행정사항 등 대학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정부가 아닌 대학 스스로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돼 대학별 전형 자율화·특성화 및 대학 스스로의 자율성·책임성 제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협의체는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하며, 개별 대학은 이에 따라 '대학별 시행계획'을 학년도 개시 1년 3개월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은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올해 8월 말까지 수립·공표해야 한다.

#### 대학협의체가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 심의

또한 기존에는 대입전형 방법을 위반했거나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학생을 정부가 직접 심의해 대학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대학협의회에서 이를 수행하게 된다.

#### ※ 대입전형방법 위반이란?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2조의 2)

- 수시1학기에 합격한 학생은 수시2학기·정시·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수시2학기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군별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각 군별로 1개 대학에만 지원 가능

이를 위해 대학은 매 학기 시작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대학협의체에 제출해야 하고, 대학협의회에서 조사를 실시해 대입 지원방법을 위반한 자의 명단을 통보할 경우 대학은 그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협의체의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 검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약 7억 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중 관련법률 개정 완료**

교과부는 이어 대학협의체의 세부적·구체적 수행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을 올 해 하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중 공포, 시행된다.

한편, 교과부는 대입 자율화가 일선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함과 동시에, 다각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대학이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해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07년 20억 → '08년 158억)하고, 대입관련 기능이 강화되는 대학협의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지원예산과 별도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과부는 대입 자율화정책 추진이 전형방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과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교협에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 대표,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 교육주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MBA 외국인 비율 세계 최하위 수준**

◎ 서울대 글로벌MBA(GMBA) 신입생 여성 비율이 세계 주요 대학 MBA 프로그램 중 최고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신입생 비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글로벌 MBA 표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은 지난 6월 3일(화) 올해 GMBA 합격자 분석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전체 합격생 가운데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세계 MBA 프로그램 중 최하위 수준인 18%로 나타났다. 광수근 경영대학 학장은 “국력과도 상관된 부분이 커 쉽게 늘릴 수 없는 분야가 외국인 학생 비율”이라며 “그래도 지원자 수가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38명

**세계 톱10 GMBA 신입생 현황**

순위	대학	국가	외국인비율(%)
1	펜실베이니아 대학	미국	45
2	런던 비즈니스스쿨	영국	90
3	컬럼비아 비즈니스스쿨	미국	42
4	스탠퍼드 대학	미국	40
5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미국	36
6	INSEAD	프랑스	89
7	MIT Sloan	미국	36
8	IE비즈니스스쿨	스페인	75
9	시카고대학	미국	35
10	케임브리지대학	영국	92
	서울대	한국	18

으로 증가한 것은 서울대 MBA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수도권 31개 대학에 598억 원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008년 6월 9일(월), 「2008년도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연차 평가 [2008년 5월 19(월)~21(수)] 결과 특성화 계획 및 실적이 우수한 31개 대학 44개 과제에 59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금년도 특성화 사업의 지원대상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지원받는 대학들과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지원받는 대학들로 구분된다.

2008년도 지원 대상 대학(31개교, 44개 과제)은 2007년 사업성과, 재정운영의 적정성, 2008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총 598억 원이 지원된다.

이 중 대학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된 30개 자유 과제에 대해 523억원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로 선정된 지정 과제(14개교)에 대해서는 75억 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특성화 사업은 대학이 스스로 정한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장학금 지원 및 기자재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부 중심의 우수 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동 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되어 전임교원 확보율이 '07년 현재 72.2%로 증가되는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사업 참여 학과 전공분야 취업률은 '05년 66.0%에서 '07년 74.9%로 높아져 학생들의 취업역량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 사업 참여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05년(55.5%) → '06년(59.4%) → '07년(72.2%)
- ※ 사업 참여 학과 전공분야 취업률  
'05년(66%) → '06년(73.3%) → '07년(74.9%)
- ※ 교육과정 개선 1,688건, 교재개발 1,802건, 교육프로그램 개발 2,971건('04 ~ '07)
- ※ 학생 장학금 지원('05 ~ '07 대응투자 포함) 2.6만 명, 534억 원

### 국내 첫 '복합 캠퍼스' 세운다

○ 오는 2012년 말 충남 홍성·예산 지역에 들어서는 충남 도청 신도시에 국내에서 최초로 '연합 캠퍼스'가 만들어진다. 충남도내 각 대학의 특성화 학과 1~2개가 참여할 전망이다.

연합캠퍼스는 대학별로 부지를 매입한 뒤 개별 교육시설을 건립, 독립적인 교육을 하고 도서관과 체육관, 운동장 등은 입주한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독립된 캠퍼스의 집합체 형태다.

6월 8일(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신도시 내에 72만 4000㎡ 규모의 연합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공주대와 선문대, 순천향대, 한서대, 청운대, 신성대 등 충남도내 10여개 대학이 입주 의사를 밝혔다.

이 대학들은 이달 연합 캠퍼스 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충남도와 함께 캠퍼스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상당수 대학은 캠퍼스 설립에 따른 정원과 건축 및 부지 면적까지 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각 대학이 특성화 학과 1~2개를 한 캠퍼스 내 부지를 매입해 입주, 종합대학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입주 대학 수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대학들과 협의를 거쳐 국제화(국제대학 국제교육문화센터), 충남 경쟁력 강화(공공정책 의료복지 종합교육지원), 신도시 기능 강화(복합복지시설) 등 3개 분야로 특성화돼 있는 학과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여기에 맞는 학과는 공주대의 국제화, 아주자동차대학의 자동차학과, 순천향대와 한서대의 의료기기 및 의학 분야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예일대 정원 7000명 늘려

○ 미국 동부에 있는 8개 명문 사립대 가운데 하나인 예

일대가 정원을 최대 7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는 총 정원의 15%에 해당되며 지난 1969년 여성 입학률 허용한 이후 최대 규모의 정원 확대다. 예일대의 이번 조치가 하버드 등 미국의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7일(토) AP통신에 따르면 리처드 레빈 예일대 총장은 예일대 법인이 기숙사가 딸린 학부를 2개 새로 만들기로 한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신설되는 2개 학부는 2013년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 1701년에 설립된 예일대는 현재 기숙사가 딸린 학부가 12개 있다.

레빈 총장은 동문과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증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재능 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유럽 대학들, 3불 정책 틀을 깨다

○ 더 타임스가 선정한 전 세계 대학 랭킹 20위권에 드는 유럽대학은 영국의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 런던임페리얼 칼리지 등 3곳. 이런 유럽 대학들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쇄신에 나섰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곳은 프랑스. 극소수의 엘리트 학생을 위한 '그랑제콜(Grandes ecoles)' 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똑같은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는 프랑스에 자율형 특수목적대학원인 'TSE'가 6월 2일(월) 문을 열었다고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5일자)가 보도했다. TSE는 정부의 간섭 없이 운영되며, 모든 강의가 영어로 이뤄진다. 학생들도 영어 이름을 쓴다. 교수와 학생 평가도 강화됐고, 교수직은 외국에 개방했다. AXA보험사와 BNP 파리바 은행으로부터 총

#### 변화하는 유럽대학

나라	정책
프랑스	영어로만 수업하는 자율형 경제대학원 'TSE' 설립 경쟁력 없는 공립대학의 합병 공립 대학에 산학협력시스템 도입
독일	공립대학의 학비 인상 허용 경쟁제도 도입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장학금 지급 허용
영국	공립대학의 학비 인상 허용
네덜란드	공립대학에 경영권 전부 일임
유럽연합	'학사 → 석사 → 박사'로 이어지는 틀에 박힌 '블로냐 협약' 깨고, 대학과 노동시장이 자유로운 새로운 교육제도 도입 '유럽연구협의회' 신설해 우수한 과학 성과를 낸 사람에게 포상

3300만 유로(약 539억 원)의 민간 기부금도 받았다. 또한 프랑스 알자스 주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공립대학 두 곳은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년 1월 합병하기로 했다.

독일은 대학들의 재정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립대학의 학비 인상 폭을 1000유로(약 163만 원)까지 허락했다.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해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줄 수 있게 했다. 영국 정부도 1년에 3300파운드(약 660만 원)까지 학비 인상을 허용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각 공립대학에 운영 전권을 넘겼다.

유럽연합(EU)은 EU권 내 22개국끼리 학위 호환을 위해 1999년에 체결한 '볼로냐 협약(the Bologna process)'을 변경했다. 회원국의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대학에서도 수학할 수 있게 '학사→석사→박사'의 과정을 규격화한 것을 완화해, 현재 학생의 60% 이상이 이 틀을 벗어나 과정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새로운 교육제도에 등록했다.

또한 유럽연구협의회를 신설해 매년 우수한 첨단 과학성과를 낸 사람에게 상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것은 매년 5억2000만 달러(약 5365억 원)의 기금으로 운영된다.

유럽에서 대학 개혁의 목소리는 늘 있었다. 하지만 '비싼 학비 금지' '민간 자금의 투입 금지' '경쟁 금지'라는 '유럽 삼불(三不) 정책' 때문에 시작조차 불가능했다. 정부지원금만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니 강의실은 수업도 할 수 없을 만큼 허름하고, 도서관은 운영비 탓에 주말마다 문을 닫았다.

유럽 국가들의 1인당 고등교육 투자액은 1만191달러(약 1043만원). 그러나 미국은 2만2476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유럽의 이런 대학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반발도 있다. 먼저, 경쟁도입을 거부하는 교수들과 학비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저항이 거세다. 또한 기업의 후원도 경제학이나 과학 분야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철학이나 사회학 연구는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더 이상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대학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은 "대학에 공적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경영권을 일임할 때 2배의 연구 성과가 나온다."고 말했다.